



# 관세화 유예 협상,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신명운 사업부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 글은 신명운 사업부회장이 4월 29일자 '영암신문' 칼럼란에 기고했던 글의 전문입니다.

**우** 리 농업의 운명을 가르게 될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미국, 중국, 호주를 비롯한 총 9개국의 관심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 5월부터 시작될 이들 국가와의 양자 협상의 결과는 쌀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야지대가 많아 예로부터 중요한 곡창지대로 손꼽혀 온 광주 전남지역의 농업과 지역 경제의 향방은 이번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 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초부터 순천, 나주, 곡성 등 전남 지역

내 다수의 시군 농민들이 쌀 개방 반대 농민 총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지역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은 압도적인 투표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과 주곡자급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일부 논자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번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해 '쌀 시장 개방 반대냐, 찬성이냐'를 둘러싼 논쟁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말미에 2004년까지 10년간 최소시장접근방식(MMA)을 통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내 총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물량을 5%의 관세율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올해까지 외국산 쌀을 들여와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컨대 쌀 시장은 1995년 이후 이미 개방되어 있었으며, 이를 관세

화 유예 형태로 개방하느냐 아니면 관세화 형태로 전환하느냐를 결정짓는 협상을 올해 말까지 진행해야 한다. 개방의 방식과 정도의 문제일 뿐, 더 이상 '쌀 시장을 개방하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여유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쌀과의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미국이 오히려 쌀 관세화 유예를 들고 나오면서 자신들의 실익을 챙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쌀 관세화 전환이 훨씬 유리한 중국은, 동북 3성(만주 지역)의 값싼 자포니카 쌀의 대 한국 수출 증대를 위해 관세화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해 올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유수의 곡물 메이저 중 하나인 '붕게' 사(社)의 본부가 있는 아르헨티나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참여도 잠재적인 걱정거리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든 파키스탄이나 인도든,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서 호락호락한 상대는 절대 없다. 9대 1의 일방적인 수세 속에서 협상을 진행해서 어떻게든 국내 쌀 시장을 지켜내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경해 열사의 자결 이후 결렬되어 교착 상태에 빠진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의 전개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가 금년 우리 농업의 최대 과제라 한다면, DDA 농업협상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간의 우리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제출된 '데르베츠 초안'에 따라 협상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 직면할 수 있

다. 우리나라가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쌀에 대한 NTC(농업의 다원적 기능)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관세상한이 설정된다면, 국내 농업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세 인하 조건 및 국내 농업보조 정책에 많은 제약이 받게 되는 상황 하에서 관세화 개방으로 결론날 경우, 국내 농업 GDP의 상당 부분이 잠식되고 농민생존권이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 모두의 냉철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중에서도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협상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국내 쌀 유통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농협 주도의 유통 구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논농업직불제 및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강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통해 쌀을 포함한 국내 식량작물의 자급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협상 자체만의 문제로 끝낼 수 없는 성격의 문제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외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쌀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이 속에서라야 바람직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전개 방향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쌀 관련 농업정책의 발전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내 쌀 시장 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시장 대응력을 높여내고 진정한 자생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한농연**